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 1. 세계 무역, 견실한 증가세 지속

올해와 내년도 선진공업국의 경제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를 상회, 2.6%와 2.7%에 각각 달할 것이라고 IMF(국제통화기금)가 전망했다.

또 개도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까지 6%의 견조세를 지속하며 세계 무역신장률은 물량기준으로 올해중 6.8%, 내년중 6.3%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AP-DJ통신이 사전입수한 반기별 세계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에서 90년대 초반의 세계경제 침체가 종료되고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세계경제 및 무역량이 신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IMF의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지난 4월의 전망치보다 올해 성장률은 0.2% 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1% 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이며 무역 신장률도 올해의 경우 1% 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IMF는 또 개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금융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3.7%, 내년 2.5%로 당초 예상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나 성장기조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그러나 미국이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구축하려면 구조적인 재정적자 문제의 축소를 위한 더욱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는 0.9%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2.5%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를 맞이 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같은 일본 경제의 회복 전망은 일본의 자산가치 하락, 지속적인 엔화 강세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에 비해 0.2% 포인트씩 상향조정된 것이라면서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성공한데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정부가 내년도도 소득세 감세폭 확대 등의 지속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독일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주로 수출촉진과 주택건설 붐에 힘입어 올해 1.7%, 내년 2.6%의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독일의 금리수준과 관련해서는 경기의 회복세 진입, 인플레이 억제성과, 최근의 통화공급량 급증을 둘러싼 불안요인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올해초부터 계속돼 온 재할인을 인상조치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 미국, 대유럽 수출 적극화

유럽을 방문중인 가튼 차관은 미행정부는 유럽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에 크게 고무돼 있다면서 미국기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독일과 영국시장을 중심으로 대유럽수출

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행정부는 현재 범유럽적으로 기업들이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대처, 리스트릭처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대유럽 수출촉진 전략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통합 이후 새로운 규제와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영국에 진출한 미국 현지업체들이 범유럽 전략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강조했다.

가튼차관은 이어 미행정부는 동·서유럽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용, 미국 기업들이 보다 많은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독일간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나 독일의 경기회복으로 독일의 대미 수입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무역불균형이 점차 해소돼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독일정부도 추가적인 경제규제 해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혀 독일 정부가 경기부양 및 수입확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가튼차관은 이밖에도 미행정부의 통상정책 초점이 급성장 지역인 아시아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은 세계교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양지역간 상호경제의 의존도를 다른 지역이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3. 미국, EU에 UR비준 촉구

피터 서덜랜드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은 EU(유럽연합)와 미국은 내년초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을 위해 금년말까지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을 비준할 것을 또 다시 강력 촉구했다.

그는 협정비준이 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일 비준과정이 협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국내적이거나 비준기관

의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FEB세미나에 참석한 윌리 클래스 벨기에 외무장관은 EU의 경우 향후 무역협정 체결권한을 EU개별회원국 정부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EU집행위가 가질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인 이견을 해소치 못해 협정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클래스 장관은 그러나 EU가 막연히 역외국들에게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런 브리튼 EU 대외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현재 집행위가 EU 의장국인 독일측과 함께 EU내부문제와 관련한 타협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는 10월 4일에 열릴 EU 외무장관회담에서 이 타협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돼 유럽회의가 UR 협정을 비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덜랜드 총장은 중국의 WTO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입허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중국측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의 WTO가입에 있어 두가지의 최대 장애물인 중국시장에 대한 외국상품의 접근문제와 중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시장 보호조치문제에 대한 이견을 크게 좁혔다고 지적했다.

### 4. 미국에 자유무역 추진 권고

美國의 유력학술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라이언 존슨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슈퍼 301조 등의 통상보복 조치를 내세워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면서 쿼터 및 관세부과 등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미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통상마찰만 부추길 뿐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존슨 연구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미행정부

는 지난 91년 미·일 반도체협정 체결로 미국 반도체업체들의 일본시장 진출이 촉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수입목표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기업별로 별도의 협상을 추진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행정부는 첨단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합작으로 세마테크사를 설립했으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고품질 TV 개발 프로젝트도 완전 실패로 끝났다고 반박했다.

존슨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민간기업에 비해 경제 및 시장감각이 떨어지는 행정부가 개입하는 관리무역방식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 미행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자유무역정책을 추진, 국가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통상정책방안으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조기에 비준, 세계교역을 촉진해야 하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중남미지역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 홍콩, 싱가포르 및 유럽 등과도 자유무역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것을 제시했다.

## 5. 일본, 액정모니터 탑재 캠코더

일본의 유력 가전업체들이 액정 모니터가 탑재된 캠코더를 잇따라 발매, 신규 수요를 개척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액정모니터 캠코더는 신AV기기로서 수요의 저변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관련업계로서는 샤프가 제일 먼저 이를 발매한데 이어 소니·부사사진필름·송하전기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본 빅터는 10월 10일에 VHS-C기

종에서 액정모니터 캠코더를 선보여 가을과 연말연시 장사에 대비키로 했다. 내년봄엔 일립이 통신기능 등이 탑재된 신형 액정모니터 캠코더를 본격 출하, 선발업체들과의 판매경쟁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의 지난 1~7월중 캠코더수요는 전년동기비 12.3% 늘어난 67만 6,000대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기준으로 약 1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캠코더시장의 이같은 확대엔 신상품으로서 관심을 끌고 있는 액정모니터 캠코더의 건투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액정모니터 캠코더 등장은 신장세가 한때 주춤하던 캠코더의 일본내 출하를 다시 증가세로 돌려놓고 있다.

일본의 캠코더 보급률은 지난 3월 현재 25.6%로 상승했으며 최대시장인 젊은 세대용 보급율이 50%선을 돌파했다.

캠코더 보급이 확대되면서 보다 우수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자 샤프는 관련업계에선 처음으로 지난 92년에 액정모니터 캠코더를 발매했다.

이 결과 이 회사의 액정모니터 캠코더인 '액정뷰컴'의 누계생산대수는 이달 1일 현재 100만대에 달했다. 시리즈로 발매된 '액정뷰컴'은 소니의 캠코더 'TR55' 이후의 최대 히트상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샤프는 금년중 일본내 캠코더시장 규모 127만대중 60만대는 액정타입이 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밀리 액정모니터 캠코더부문에선 소니가 지난 2월에 '헨디컴 코믹스' CCD-SC7을 발매한데 이어 부사사진필름도 비슷한 시기에 분해와 결합이 가능한 '심플Hi8' FS-30MT를 선보였다.

이어 일본빅터도 다음달 VHS-C타입인 '텔레비디오무비' GR-SV3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신제품은 야외에서 TV와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도록 TV튜너팩을 장착한게 특징이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4년전에 비디오텍·카메라·TV튜너·액정디스플레이를 각각 조

립한 무비컴포넌트 'CET S'를 선보인 적이 있다.

## 6. 일본, 시장서 외산반도체 점유율 점증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지난 2·4분기중 21.9%로 1·4 분기의 20.7%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 연 3분기기간동안 20% 수준을 넘어섰다고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했다.

미키 캔터 USTR대표는 이와관련, 외국산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이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는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일 반도체협정의 혜택이 양국업체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캔터대표는 그러나 아직 이같은 수준에 만족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양국간 협정에 의거 일본시장 접근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USTR은 지난해 외국산반도체의 일본시장점유율 평균치는 19.4%로 미·일 반도체협정에서 정한 목표수준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 7. EU, 남아공에 GSP공여

EU(유럽연합)는 남아공화국의 급속한 정치환경개선 등을 높이 평가, 금년말까지 4개월간 남아공에 대해 GSP(일반특혜관세) 혜택을 공여하기로 하고 9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U의 대남아공 GSP공여계획은 당초 지난 7월 18~19일 각료이사회에서 잠정통과 됐었으나 세부 시행계획 마련에 시일이 다소 소요돼 지난 8월 19일 최종확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31일자 EU관보에 발표된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남아공이 EU로부터 GSP혜택을 공여받게 된 품목의 대부분은 EU와의 경합관계가 약한 비민감품목들이므로

나타났다.

EU의 이번 GSP공여조치는 지난 6월말 EU 집행위 사절단의 남아공 방문시 남아공 정부의 요청과 금년 4월 남아공의 민주화진전을 반영한 EU-남아공간 관계개선 각서이행 등을 위해 취해지게 됐다.

EU집행위는 금년말까지 4개월 동안의 대남아공 GSP공여조치로 총 640만 ECU(유럽통화단위)의 관세수입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8. EU, 「공동환경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

'89년 집행위는 환경피해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라는 EU각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환경피해구제제도 지침안을 제안했고 91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93년 3월 집행위는 폐기물 책임을 민간에게 부과하는 EU지침과 공동보상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녹서를 채택했다.

이 녹서에 따르면 EU차원의 환경피해 구제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환경피해 보상책임의 소재규명 문제를 비롯, 환경의 정의, 환경피해 입증 및 보험보상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공동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EU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엄격한 환경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24개 유럽이사회 회원국은 지난해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환경피해의 책임을 민간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협약이 최종 채택될 경우 환경피해책임과 관련한 EU의 입법논쟁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기업은 집행위가 자신들에게 상당한 비용부담을 안겨다 주는 비효율적인 미국 슈퍼펀드법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일명 슈퍼펀드법으로 지칭되는 엄격한 환경포괄 보상책임법이라는 환경 피해구제 제도를 지난 80년에 도입한 바 있다.

이 법규는 환경구제 보상 책임이 소급 적용되며 연대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 피해구제의 책임대상을 환경피해 발생지의 소유인, 공해발생 당시의 소유자, 폐기물 발생업체, 폐기물 운송책임자 및 폐기물 거래업체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소속 환경보호청은 환경피해 구제 과정에서 긴급히 발생한 비용을 슈퍼펀드에서 우선 충당하고 추후 환경피해를 야기한 당사자에 대해 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 9. 멕시코, 새 원산지 증명제 시행

멕시코 정부는 지난 7월중순 중국 북한 등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비회원국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증명서제도를 새로 적용한데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을 제외한 GATT회원국에 적용할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Hard Certificate of Origin) 제도를 확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멕시코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제도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지역산 덩핑제품이 제3국을 통해 불법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류 직물 및 신발 등 일부 경공업제품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GATT회원국 수출업체들이 관련 경공업제품을 멕시코로 수출하려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Soft Certificate of Origin)을 멕시코 대사관 등 멕시코 정부가 지정하는 현지기관에 제시, 확인서명을 받은 후 이를 통관시 멕시코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이같은 엄격한 원산지 증명서제도 시행으로 외항과 국경지역에서 수입화물통관이 지연되거나 적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확인작업을 국경지역에서

강행하지 않는 등 최대한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등 아시아지역산 제품을 수입해다 멕시코에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른 수출국들도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대멕시코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10. 브라질, 관세인하 단행

브라질 정부의 대대적인 관세인하 조치로 브라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브라질 현지 신문들은 키로 고메즈 재무장관이 브라질 리얼화의 급격한 평가절상과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해 1만 3,000개 품목의 중심관세를 현행 20%에서 14%로 대폭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키로 함에 따라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브라질의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관세인하 방안에서 자동차의 수입관세를 35%에서 20% 인하 하는 것을 비롯, 스테레오 장비의 관세를 30%에서 20%로, TV의 관세를 35%에서 20%로 내리는 등 자국산업보호가 필요한 컴퓨터와 일부 자본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큰 폭으로 인하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당초에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와의 자유무역협정(METCO-SUL)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로 관세인하조치를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1일부로 새로 도입한 리얼화의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브라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데다 물가오름세도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처, 관세인하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이와함께 쿼터규제 등 다른 수입제한조치도 대대적으로 철폐할 계획이다.

브라질 중앙은행 측은 이같은 조치가 단행 되면 브라질의 하루 평균 수입액이 지난 상반기 중 8,070만 달러에서 1억 6,600만 달러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부터 관세인하 등에 따른 수입 확대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미수입의 경우 올해 25% 가량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조치가 취해지면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유지, 최근 외환보유고가 420억 달러에 달하게 되면서 당초 미달러화와 같은 수준을 유지키로 했던 리얼화의 시세가 이번주 들어 0.851달러로 상승함으로써 브라질 수출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11. 브라질, 수출진흥책 수립

리쿠페로 브라질 재무장관은 최근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외국무역포럼에서 일련의 수출진흥책을 발표했다.

리쿠페로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출확대를 위한 항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수출진흥책의 골자는 조세경감조치, 저리수출용자의 확대, 수출신용보험의 검토, 반덤핑조치의 강화 등으로 되어 있다. 진흥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 조세경감조치

- ① 공업제품세의 세율인하를 검토한다.
- ② 자본재부문에 인정하고 있는 공업제품세 면세리스트를 확대한다.
- ③ 수출용 생산재에 대한 사회통합기금(세율 0.65%) 및 사회보증용자부담금(세율 2%)의 대부분을 인정한다.
- ④ 1차 산품수출에 관한 사회통합기금을 면제한다.
- ⑤ 국내 수출입전업 상사에 대한 사회통합

기금을 면제한다.

⑥ 소프트웨어의 수입관세(25%)를 폐지한다.

⑦ 수출금융계획 대상품목 리스트를 확대한다.

#### ▲ 저리수출용자의 확대

① 자본재 수출을 대상으로 한 국립경제 사회개발은행의 기계장치 수출용자 프로그램의 특별저리용자 한도를 연내에 4억 달러 확대, 95년도에는 8억 달러로 한다.

② 새로운 저리수출용자제도를 개설한다.

③ 기계장치 수출용자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수출신용보험의 개설=영세기업 또는 소기업이 신용보험을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특정부문에 대한 특별인센티브의 공여= 해외시장에서 아시아 각국 제품과의 경쟁에 처할 신발·섬유 등의 부문에 특별인센티브를 공여한다.

#### ▲ 반덤핑조치의 강화

① 덤핑방지 강화책을 결정한다.

② 브라질 제조업에 대해 부당경쟁을 행하고 있다고 간주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

### 12. 중국 기계·전자 수출입 급증세

중국의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입이 모두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수출의 경우 오디오시스템·조명기기·전화기가 호조를 보인데 반해 수입에 있어서는 선박·항공기·공작기계 등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 1~8월중 중국의 기계류 및 전기장비 수출이 전년동기비 37.1% 증가한 17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이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5.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 같은 기간중 기계-전자부분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24.8%를 차지, 전년동기의 23.8%보다 늘어났다.

같은 기간중 이 부분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27.3% 증가한 34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같은 증가율은 전국 평균치에 비해 9%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또 이 부분의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의 46.8%에서 50.4%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중 중국은 62.9% 증가한 12억 1,000만 달러어치의 라디오, 테이프 레코더, 오디오 컴포넌트 시스템을 수출했고 45% 증가한 5억 2,000만 달러어치의 조명기기를 수출했다.

전화기 수출은 83% 증가한 3억 9,000만 달러, 선박은 280% 증가한 3억 5,000만 달러, 컨테이너는 190% 증가한 2억 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같은 기간중 전화교환기 수입은 140% 증가한 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선박은 330% 증가한 9억 6,000만 달러, 항공기는 120% 증가한 22억 6,000만 달러, 공작기계는 27.3% 증가한 12억 6,000만 달러, 기중기 등 중장비는 72.8% 증가한 6억 5,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 13. 중국, 3년내 종합적 경제입법 완료 방침

중국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장치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중국의 한고위 입법가가 밝혔다.

왕한식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경제구조에 필수적인 주요 법이 전인대의 입법계획에 따라 향후 3년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8차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92년도 의정기간중 입법계획을 확정하고 152개 법을 제정키

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54개법이 경제문제와 관련돼 있다.

왕 부위원장은 현재까지 54개 경제법 가운데 18개법이 제정됐으며 나머지 법안은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주요법에는 회사법, 부정경쟁방지법, 중재법, 재정법, 노동법, 대외무역법, 도시부동산법 등이 포함돼 있다.

왕 부위원장은 재정 측면의 입법활동이 취약한 편이나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증권법이 제정중에 있으며 송장 및 보증에 관한 법역시 초안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법기구가 위조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탈세, 상표위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인대는 기업관리, 증권, 화폐 및 문서위조부문에 있어서의 위법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 14. 대만, 해외투자 급증세 지속

투자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1~8월중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대한 투자실적은 이 지역이 대유럽 투자에 대해 면세혜택을 공여하고 있는 것이 호재로 작용,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한 8억 2,140만 달러에 달했다.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도 138% 늘어난 6,320만 달러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미국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실적은 각각 73%, 66% 줄어든 1억 100,000 달러, 5,270만 달러에 머물렀다.

또 이 기간중 중국에 대한 투자는 6억 5,21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투자지역은 상해, 광둥시로 각각 1억 740만 달러, 4,170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달성했다.